

의붓아들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형량은?

딸 가방에 가둬 죽게해 징역 6년 선고 받은 엄마보다 높을 전망

양형 참작사유 거의 없어...미필적고의 입증되면 살인죄 적용도

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계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A씨(43)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충남 천안시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9)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 두 개에 7시간 동안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계모 A씨(43)는 B군을 처음에 가로 50cm, 세로 70cm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cm, 세로 60cm 크기의 가방에 가

엘레베이터 CCTV 분석에서 A씨는 B군을 가방에 가둔 채 3시간 가량 외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달 5일 어린이날 B군은 머리가 찢어져 인근 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의료진은 A군 팔목 등에 있는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했고, 기관 측은 13일께 A군의 집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당시 "작년 10월 아들이 말쑥 피운다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때린 적이 있다"며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인데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다. 반성하

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하면서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로 바꿨다. A씨는 또 의붓아들은 무자비하게 학대한 것과 달리 SNS에 친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글과 사진들을 게시했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5살배

기 딸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딸을 3시간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녀들이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었다.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년~7년이다.

이씨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적용돼 6년~10년이 적용됐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혐의 2개가 더 적용돼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년~11년 8개월로 정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권고형 범위 중 가장 최저형인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딸이 목숨을 잃게 돼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어릴 때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 결혼 후에도 시댁·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우울증을 겪은 후 자신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과 다르게 자라야 한다는 강박에 훈육에 집착하게 된 점,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점, 자녀들이 이씨를 평소에 잘 따랐던 점을 고려해 권고형의 최저형을 선고했다.



초단시간 중심 최저임금 협상 촉구 퍼포먼스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실태 조사 결과 및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한 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수당을 기본급화 하고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차별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연 지지성명 발표 시민단체,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소

“회원 아닌 단체 넣고 일부 회원단체 동의 안 구해” 연대회의 “발표까지 이견 없어...의혹 사실무근”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회원단체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가 검찰에 피소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회의) 현직 인원들을 사문서 위조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준모는 연대회의 측이 정의기

억연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가입 단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준모는 연대회의가 밝힌 '330여 회원단체'에는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대회의에 가입된 것으로 기록된 단체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연대회의 측은 지난달 14일 '정의기억연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

의 성명을 발표하며 330여 회원단체의 총의를 모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회원 가입 신청을 하거나 회비를 낸 적 없는 단체들의 이름이 연대회의 홈페이지에 회원단체로 올라와 있고, 회원 단체 일부는 성명 발표 당시 동의를 한 적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측은 "회원단체가 아닌 단체를 회원단체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사에 거론된 회원단체는 창립 전후를 제외하고 회비를 미납했으나 탈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남 영광 전기자동차 연구소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8일 오후 8시52분쯤 전남 영광군 대마면 대마산업단지 내 한 전기자동차 연구소 실험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실험실 내부 약 100m와 소형 전기자동차 1대가 불에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9시49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11시20분쯤 잔불정리를 마쳤다.

소방당국은 실험실 아래층에 변전설비가 있어 화재진압에 어

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연구원 6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이들은 폭발음을 듣고 무사히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부인 회사에 구청 수의계약 몰아준 구의원 의원직 박탈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 본부는 자신의 배우자 회사에 수천만원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광주 북구의회에 대해 당적 제명과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노조는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칠 전 북구의회 A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며 “해당 비리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위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A 의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두 번째 회사를 설립해 내부감시를 회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왔으며, 매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합당한 처벌과 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꼬리자르기식 뒷수습으로 넘어가기

를 반복하면서 결국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11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대처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A 의원의 당적을 박탈해 시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대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북구의회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해당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망설임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